

# 안전 조치 및 추가의정서

김민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핵비확산정책팀 연구원



1990년대 초 이라크 및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 따라 기존 안전 조치 체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1993년 6월 이사회에서 안전 조치 강화 방안(93+2) 사업을 착수한 바 있다.

동 사업은 1997년 5월 IAEA 특별 이사회에서 모델 추가의정서 (INFCIRC/540)로 승인됨에 따라 강화된 안전 조치 체계 (SSS: Strengthened Safeguards System)를 확립하게 된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추가 접근, 환경시료 채취 및 핵연료 주기 연구 개발 관련 정보 제공 등으로서 미신고 핵활동 탐지를 위한 기구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다.

지난 제50차 총회는 ‘안전 조치 체계의 효과성 강화 및 효율성 향상과 모델 추가의정서의 적용’에 대해 사무총장이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도록 하는 결의안 (GC (50)/RES/14)을 채택하였고, 본 보고서를 통해 강화된 안전 조치 체계에 따른 기구의 지난 1년간의 안전 조치 이행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총회 기간 중 전체위원회 (Committee of the Whole)에서는 안전조치 및 추가의정서와 관련하여 결의안 초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호주에서 제안한 ‘안전 조치 체계의 효과성 강화 및 효율성 향상

과 모델 추가의정서의 적용’의 결의안 초안은 별도의 실무 그룹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당초 결의안 초안은 지난 제50차 총회에서 결의된 결의안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기구의 안전 조치 이행 현황에 따라 일부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나, 일부 회원국들이 추가로 여러 가지 수정 의견을 제안하였으며 몇몇은 상당한 의견 충돌로 회의에 난항을 겪었다.

특히, 본 결의안에 추가로 기구의 현장 상의 기능 중 하나인 ‘핵군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문구 삽입과 관련하여, 제안국인 이집트와 초안 작성국인 호주 및 EU 국가를 중심으로 양분되어 논쟁이 지속되었다.

이런, 파키스탄, 브라질, 아르헨

\*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학사, 석사

티나 등은 이집트의 제안에 지지하는 한편, 현장 상에 나와 있는 기구의 기능이므로 삽입하길 주장하였으며, 초안 작성국과 일본, 중국 등에서는 해당 결의안이 기구의 안전 조치 및 추가의정서 결의안이기 때문에 본 결의안에서 언급할 필요성이 없으며, 다른 회의 또는 결의안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하며 대처하였다.

이에, 실무 그룹 회의의 의장을 맡은 노르웨이 대사는 3일간의 소모적 논쟁을 끝내기 위해 모든 회원국의 컨센서스 하에서 작성되었던 제50차 결의안을 기초로 일부 업데이트 사항이 반영된 제51차 결의안을 전체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하고, 전체위원회는 이를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금년 IAEA 총회에서 안전 조치 및 추가의정서와 관련된 결의안 채택을 지켜본 결과, 안전 조치, 특히 추가의정서를 바라보는 회원국 간 시각의 차가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집트, 이란, 파키스탄 등 일부 비동맹권 국가에서는 안전 조치에서의 중심은 전면안전조치협정이며, 추가의정서는 전적으로 자발적이고, 추가적인 별도의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서방 국가에서는 안전 조치에서의 추가의정서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볼 때, 향후 안전 조치의 필수 요소로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일부 비동맹권과 서방 국가 간의



IAEA 총회(AC) 및 이사회 개최 장소(VIC) 전경. IAEA 총회가 개최되는 AC(Austria Center)와 이사회가 개최되는 VIC(Vienna International Center)는 Unocity라고 하여 서울의 여의도와 같이 비엔나 다뉴브강 사이에 별도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립 구도에서 외교적 차원에서 마찰을 최대한 피하도록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추가의정서를 서명, 발효하여 이행하고 있는 국가로서 안전 조치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구의 기본 방향을 지지해 왔다.

특히 대규모 원자력 산업을 영위하며 원자력 발전에서 세계 6강의 입장에서, 평화적 핵활동의 보장을 위한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2004년도 핵물질 실험 사건으로 국가 신뢰도에 적잖은 타격을 입었던 것은 사실이나, 문제 해결 과정에서 기구와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곧 기구로부터 우리나라

내에 미신고 핵활동이 없음을 인정하는 포괄적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통합안전조치 체계(IS: Integrated Safeguards)로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투명성을 인정받고 IS로의 진입으로의 프로세스가 다소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구에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현 국가사찰도 향후 IS진입에 따라,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